01

차 없는 도시를 지향하는 함부르크 도시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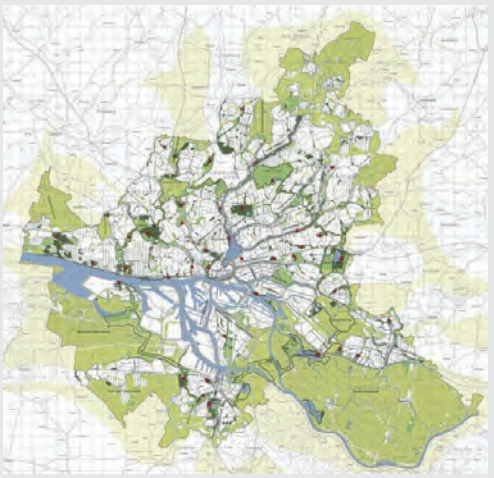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함부르크는 지역의 40%가량이 녹지, 공동묘지, 운동시설, 정원, 공원, 그리고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상 최초로 이 도시는 이들 녹지를 통합해 보행 및 자전거 전용 도로로 함께 연결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향후 20년 동안 함부르크 내 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제거하고자 하는 목표로 계획된 '그린 네트워크 플랜(green network plan)'이다.

시의 대변인은 이 프로젝트가 도시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전했다.

"런던을 포함한 여타 다른 도시는 (도심 외곽에 펼쳐진) 환상형의 녹지(green rings)가 존재한다. 그러나 외곽지역에서부터 시내의 중심가를 아우르는 함부르크의 그린 네트워크는 고유하다. 15년에서 20년 사이에 당신은 함부르크를 오직 자전거와 두 발로 탐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함부르크에는 남측과 북측에 두 개의 거점 녹지축이 있다. 전체의 도시를 아우르는 그린 네트워크 플랜이 더욱 명확해지기 위해, 계획 팀은 주요 7개 지역의 지자체 시민들과 함께 작업하였다. 각 지역이 함께함으로써 모든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연으로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지속가능한 통근체계를 누릴 수 있다.

함부르크는 또한 탄소흡수량을 높이고 도시의 미세기후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녹지를 추가로 건설하고자 한다(함부르크의 평균 기온은 지난 60년 동안 1.2도 정도 높아졌다). 새롭게 구성되는 녹지는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다.



함부르크의 그린 네트워크 플랜

함부르크는 해수면이 20㎝ 상승해 왔고, 2100년에는 30㎝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함부르크는 도시계획의 최근 추세를 따르고자 한다. 도시의 외곽과 내부를 연결하기 위해 자전거도로를 건설한 코펜하겐의 도시계획이 좋은 예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 계획은 자동차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만들었다.

http://www.archdaily.com/464394/hamburg-s-plan-to-eliminate-cars-in-20-years/

02

지역가치 향상을 위한 멜버른의 도시 숲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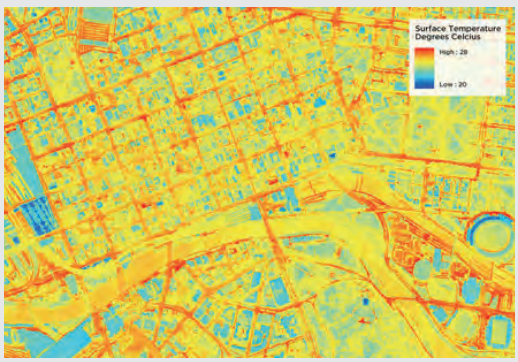
최근 연구에 따르면 멜버른 시는 향후 20년 내에 평균 기온의 증가, 강우량의 감소, 폭염 및 홍수발생률 증가, 열섬현상 심화 등 심각한 기후변화를 경험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멜버른 시는 건강하고 살기에 적합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기존의 도시 숲을 복구하고 확장하는 전략을 취하기로 하였다. 멜버른 도시 숲 전략의 목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탄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도시 숲의 주요 기능은 도시의 기온을 낮추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 전역에 캐노피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써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보행자의 열적쾌적성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빗물의 흐름과 영양부하를 줄인다는 점에서 생태적으로도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며, 모임 장소를 만들고 자연과 매일 상호작용을 허용함으로써 지역 사회를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에너지 비용의 절감, 지역 가치의 향상, 관광자원으로의 활용성 등 부차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한편 멜버른의 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가뭄이 나무를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 놓이도록 했으며, 그로 인해 상당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향후 10년 이내에 나무의 수는 현재보다 27%가량 줄어들 것이다. 이에 따라 멜버른 시는 숲의 진화와 보존 및 지속력에 대한 강한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함으로써 이러한 예측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시의 목표는 숲의 다양성을 증가시키고 기존의 식물 건강, 토양 수분 및 생물 다양성을 개선하며, 캐노피의 면적을 2040년까지 40%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노스웨스트 멜버른, 멜버른, 켄싱턴에 있는 도시 숲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으며, 시민들로 하여금 2014년 5월까지 의견을 제출하고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http : //sourceable.net/melbournes-urban-forest-strategy/



도시숲의 열섬형상 완화효과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기여하는 도시숲

03

에너지 분권화: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천하는 영국의 행정자치구

유가상승과 기후변화로 대다수의 지방 자치구는 에너지 자급자족을 실천하려고 한다. 위원회는 버밍엄시의 시장 조지프 체임벌린이 지역의 에너지와 수자원을 시의 소유로 사용함으로써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켰던 1870년대의 영광을 회복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워킹 협의회: 에너지 분권화(Woking council: dencentralising power)

에너지 자치구의 시초인 워킹시는 1999년부터 에너지 공급의 분권화를 시작하였다. 워킹은 에너지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였고, 지금은 도심 중심가에 있는 상업시설과 의회 건물에 열・전기 등을 제공하는 지역 발전소의 수를 상당수 확보하였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의회의 지속가능성 계획에 투자하는 데 사용된다.

이곳은 태양광 기술과 열병합 발전 시스템을 결합하여 지역 보호시설단지인 브록힐에 100%의 에너지 재생을 실현한 최초의 지방 자치구였다. 이 프로그램으로 자치구는 탄소배출량을 상당량 줄일 수 있었고 현재는 연료 빈곤이 문제시되는 거주민이 없다.

스톡온트렌드 협의회: 쓰레기를 에너지로 전환(Stoke-on-Trent council: turning waste into energy)

스톡온트렌트시는 에너지를 자급자족하고 지역 주도적인 에너지 인프라의 사용을 꿈꾼다. 에너지의 자족적 공급을 넘어서서 그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변동으로부터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자기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다.

위원회의 주요 전략 중 하나는 혐기성 소화를 통해 지역의 쓰레기를 태워 바이오가스를 생성하는 것이다. 세라믹 공장은 여기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고정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이 도시는 또한 지하 탄광의 따뜻한 물을 활용할 것이다. 이는 2008년 세계 최초로 광산 물 발전소를 설립해 성공적으로 구현한 네덜란드의 도시 헤를렌의 사례에서 아이디어를 얻었다.

해링게이 협의회: 녹색 기업 활성화(Haringey council: enabling green enterprise)

해링게이는 2020년까지 지역의 탄소배출량을 40% 감축할 것을 서약한 영국 최초의 자치구다. 이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링게이는 탄소위원회를 만들고 지역 기업을 발족시켜 집단 에너지 기업을 숙련시키는 데 노력해 왔다.

이 경우는 지역 공동체와 주민 위원회와 함께 또 다른 규모로 작동한다. 계획에는 개조주택 및 저탄소 기업 지구에 초점을 맞춰 자치구 경계 너머와도 협업하는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위원회는 새로운 저탄소 접근 방식과 비즈니스 모델 설계를 돕는 더럼 대학의 에너지 연구소와 협업하고 있다.

http://www.theguardian.com/local-government-network/2014/feb/10/local-authorities-energy-self-sufficiency

04

미국건축가협회 · MIT 선진도시화센터의 건강도시디자인 협동연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활동행태를 살펴보면 걷기보다는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앉아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경향을 보인다. 어린이 비만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는 최근 만성질병 관련 의료비용과 비전염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경제기반이 약한 지역과 도시화가 높은 지역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공공의 건강이 도시 계획 및 설계의 차원에서 주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미국건축가협회(AIA: 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와 MIT 선진도시화 센터(MIT, CAU: Center for Advanced Urbanism)는 건강과 도시 커뮤니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디자인에 초점을 맞춘 협동연구에 들어갔다. 예방의학의 차원에서 미래의 건축 및 도시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려는 시도다. 이 연구는 클린턴 글로벌 이니셔티브(Clinton Global Initiative)의 '10년의 디자인(Decade of Design)' 선언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건강을 촉진하는 지역계획 및 설계 모델을 실제적으로 실험하고자 한다.

이 다년간의 사업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그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건강과 도시의 관계성에 대한 기존 연구 및 문헌 분석을 통해 관련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물리적 환경은 비만에서부터 정신질환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주거지의 교통수단, 공원과 오픈스페이스를 구성하는 지역 및 지구계획, 도시 설계안 역시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인근의 유해한 환경은 천식 등 직접적인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사회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자본, 그리고 건강복지와 연관된 사회기반 역시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

이제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에 착수한다. 건강한 환경에 적합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대안적인 디자인 모델을 개발하고, 선택된 대상지에서 실제 개발계획을 수행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다. 해당 연구는 도시의 사회 · 경제 및 환경적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리고 지역 관계자 및 공공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그리고 다학제적 관점에서 커뮤니티의 변화를 목표로 한다. 연구진은 이 프로젝트가 도시 및 지역 디자인의 새로운 모델을 선도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http://www.fastcoexist.com/3022922/rethinking-our-cities-to-fight-obesity
http://www.aia.org/advocacy/ClintonGlobalInitiative/index.htm
http://cau.mit.edu/news/report-state-health-urbanism

05

함부르크 공습벙커의 경제적 · 문화적 재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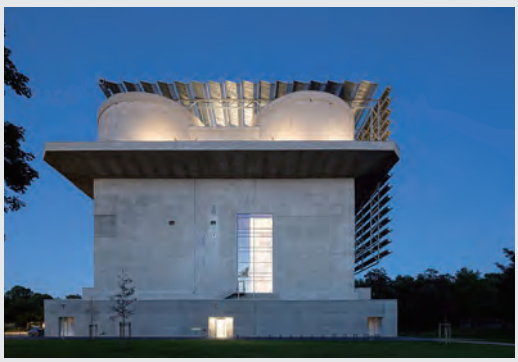
IBA 함부르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공습벙커 건물을 지역사회를 위한 에너지 플랜트로 복원하였다. 60년 가까이 버려져 있던 콘크리트 공습벙커는 이 사업을 통해 3,000가구 이상의 가정에 열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건물로 재탄생하였다.

건물의 지붕과 남쪽 외벽에 설치된 강철 프레임은 일주일에 100kW 이상의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태양전지 패널의 하부구조다. 전쟁 당시 내부폭발로 생긴 벙커 중심부의 대형 공간은 혁신적인 완충저장고가 된다. 이 공간은 산업폐기물, 바이오 메탄가스 구동 열과 전원 장치, 그리고 목재 연소 시스템으로부터 생산되는 열에너지를 받게 되는데, 벙커 중심부의 완충 효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활용을 가능하게 한다. 더불어 이 에너지 벙커 시스템 덕에 연간 6,600미터톤 정도의 CO_2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층부에는 카페를 개설해 방문객을 받고 있다. 30m 높이에 있는 이 카페의 테라스에서 사람들은 항구와 언덕 등 도시의 독특한 경관을 구경할 수 있다. 방문객들은 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공습벙커의 역사와 에너지 벙커로의 변화과정을 소개하는 전시에도 참여할 수 있다.

개념구상단계부터 1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은 현재 생산 시스템을 가동하여 지역사회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상태이며, 2015년에 모든 계획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http://www.designboom.com/architecture/iba-hamburg-converts-an-abandoned-nazi-bunker-into-an-energy-producing-facility-2-9-2014/
http://www.iba-hamburg.de/en/projects/energiebunker/projekt/energy-bunker.html
http://www.mnn.com/earth-matters/energy/blogs/german-air-raid-bunker-transformed-into-renewable-energy-facility



건물의 지붕과 외벽에 설치된 태양전지 패널

카페로 활용하는 최상층부 테라스

01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출범

정부의 건축정책을 수립하고 주도할 대통령 소속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공식 출범하였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축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2008년 첫 출범 이후 올해로 3기를 맞았으며, 국토환경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건축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주요 사업 등을 지원해 왔다.

이번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장관 등 10개 부처 장관과 위촉직 민간위원 13명 등 총 23명으로 구성되었다. 민간 위원은 신임 위원장에 선임된 김석철 명지대학교 석좌교수를 비롯해 건축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업계의 인사들로 구성되었으며 건축 · 도시 분야 외에도 문화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촉되었다.

제3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건강한 국토환경, 행복한 국민 삶터'라는 비전을 토대로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건축 · 도시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하였다.

이날 위원회에서 김석철 위원장은 "국토환경 디자인 개선 및 건축문화 진흥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제고와 국가의 품격 향상을 도모한다는 위원회의 설립목적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각계의 의견수렴 창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위촉식과 더불어 진행된 첫 전체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세칙 등 13개 규정 개정(안)을 심의 · 의결하였으며, '건축 서비스 활성화 방안'과 '한국건축규정 추진방안'에 대하여 보고받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는 "앞으로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많은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일을 해 나가도록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하고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 2013.12.27

02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전 세계적으로 건축물 디자인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추세이며, 아울러 친환경 · 저에너지 건축물, IT지능형 건축물 등 건축설계 및 기술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획일적인 설계의 양산, 가격 위주의 설계자 선정, 상징적 건축물을 해외 건축사가 설계하는 관행 등으로 그 경쟁력을 잃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정부는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제정하였고, 그 후속조치로서 올해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공공건축물의 디자인을 높이기 위해 설계비가 2억 3,000만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를 시행하여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평가 항목에서 가격의 비중을 낮추고 디자인과 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설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계약 체계를 개선하였다. 발주자와 설계자 사이에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였고, 실비정책가산방식 도입 등으로 설계대가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국내의 우수한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건축물 정보 모델링,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을 활성화해 설계 · 시공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 공공재인 건축의 가치를 국민이 발견할 수 있도록 교육 · 홍보 프로그램도 운영하기로 하였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건축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 녹색건축과 · 건축문화경관과, 2014.1.29.

03

재해 및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를 비롯해 강원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설 등으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후변화 대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폭설과 지진 등 기상이변에 대비한 건축기준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개정된다. 개정 전까지는 모든 건축물에 지붕 기울기가 3분의 1 미만인 경우 1㎡당 습설하중을 25㎏ 추가하고, 관측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산지 등 국지 폭설이 있었던 지역은 지역적설하중을 상향 적용할 수 있도록 허가관청에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PEB 등 특수구조물 설계 및 감리의 내실화를 꾀하였다. PEB 구조는 작은 설계 또는 시공 부실에도 구조체가 일시에 붕괴되는 구조적 특징이 있어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PEB 등 특수구조물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였다. 설계・감리 과정에 건축구조기술사가 참여해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를 확인하도록 건축법시행령도 곧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PEB 구조에 대한 불법 용도변경을 조사 중이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권자가 당초 허가받은 구조와 용도로 사용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철저히 부과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거 법령인 「건축법시행령」과 「건축구조기준」을 연내에 개정하고, 건축물 안전강화 TF를 운영해 3월 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2014.3.3.

04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 발표

에너지 사용량의 증가로 인해 해마다 대규모 정전사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절전 위주의 단기처방보다는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3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방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실천전략은 크게 네 부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신축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목표는 2009년 대비 냉・난방 에너지를 90% 절감하는 주택 설계를 유도하는 것이다. 아울러 201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 할 계획이다.

둘째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지원한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소비 증명제 등 자발적 에너지절약 유도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실질적인 에너지 절감에는 역부족이었다. 따라서 금년부터는 금융조달 및 이자지원, 그린카드와 연계한 금전적 혜택 부여, 온실가스 감축량 거래,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셋째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성능 개선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에너지 성능 기준을 상향 적용한다.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 성능이 낮은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성능개선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건축물 성능개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지원 체계 및 자재정보 시스템 등을 부처 협업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2014.3.13.

05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위한 2014 환경부 업무계획 - 친환경 에너지 타운,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 추진

환경부는 지난 2월 국민의 지속가능한 환경복지를 구현하고 환경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조성', '환경의 새로운 가치와 기회 창출', '제대로 된 환경정책'이라는 3가지의 주요 과제를 바탕으로 미세먼지 합동예보제, 유해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자원 및 에너지 순환성 강화, 배출권거래제를 통한 탄소금융시장 조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세부전략이 제시되었다. 이 가운데 건축 및 도시 분야와의 주요 협업과제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사업'과 '기후변화 안심도시 조성사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구축사업'은 매립·소각장, 오염물질 처리시설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기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수익모델은 음식물·축산분뇨 등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이용해 열·전기 등의 에너지를 생산해 주변 지역에 공급하고,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해 공동의 이익을 내는 방식이다. 현재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특별팀(TF)이 조직되었고, 시범사업 유형과 추진체계 등이 4월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환경부가 주관하며, 본부와 환경공단·전문가·지자체 등으로 추진단을 꾸려 시범사업 설계와 진행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

'기후변화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최근 폭설 및 한파, 폭염, 홍수 등 기상이변과 기후변화에 의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다.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 관리가 중요시되는 만큼 환경부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국 50곳에 기후변화 안심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곳에 시범사업을 펼치며, 해당 지역에는 '주택개량사업' '침수 차단시설' '폭염 대비 쿨링존 조성' 등이 지원된다.

에너지효율의 강화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관련한 친환경 정책이 대두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국토교통부 등도 관련 R&D 과제 발굴에 부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택 에너지효율성을 위한 기술 및 디자인 개발, 제로에너지 기술의 보급·확대, 저소득층 난방에너지 공급을 위한 적정기술 개발 및 지역기반 마련 등 앞으로 에너지 분야와 건축 및 도시 분야의 협업이 중요시될 전망이다.

환경부, 2014.2.19.

06

도심 내 유휴지 재생방안, 서울시 마포 석유비축기지 기본구상 발표

13년간 방치되었던 서울시 마포구 석유비축기지가 '환경과 재생'을 주제로 한 친환경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작년 5월부터 6개월간 아이디어 공모와 시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거쳐 지난 1월 이와 같은 골자의 활용방안과 향후 로드맵을 담은 '마포 석유비축기지 기본구상'을 발표하였다.

시는 유례없는 산업유산의 장소적 가치와 석유탱크 내부의 독특한 공간적 특성을 살린다는 부지 이용 원칙에 따라 5층 건물 규모의 5개 석유탱크와 옹벽을 재생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며, 다양한 보행체계를 도입하여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개발은 사업 여건에 따라 석유비축탱크 일대, 주차장 부지 일대 각각을 중심으로 2단계로 추진된다. 구체적인 탱크별 도입시설과 규모를 포함한 실제 설계는 건축가와 조경가 등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현상설계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4월 국제현상설계를 공고하고, 하반기에는 당선작을 선정하며,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15년에 착공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노을공원, 하늘공원, 월드컵공원 등 주변의 친환경 문화자원과 어우러져 재탄생하는 마포 석유비축기지가 서울시 서북권의 환경생태와 문화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공공개발센터, 2014.1.10.

07

2014 아시안게임 대비, 인천시 도시디자인 개선 사업

인천시는 오늘 9월 개최되는 아시아경기대회에 대비해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과 경관 개선・조성 등 도시디자인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도의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역점사업으로는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개발 및 보급,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주변 경관 개선, 소래철교 경관 조성, 인상에 남는 도시 진・출입 경관 개선, 도시 브랜드 개발 등이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는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라는 목표와 아울러 신・원도심이 조화로운 국제도시 조성에도 역점을 둔다. 따라서 군・구,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협조와 유관기관과의 상호협력체계도 구축하고자 한다.

한편 인천시는 이러한 역점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난 1월 관내 7개의 대학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학의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응 활용하여 소통하는 디자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원도심 활성화 사업과 도시 브랜드 개발 등에 관내 유관기관과 입주기업, 주민 등을 참여시켜 범시민 디자인 운동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도시디자인추진단, 2014.2.13.

08

부산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4차년도 계획, 테마가 있는 문화마을 만들기

부산시의 대표적인 도시재생 및 지역활성화 사업인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 올해로 4차년도에 접어들고 있다. 지금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개선된 감천문화마을, 동구 이바구길 등은 달동네 이미지를 탈피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급증하는 성과를 보이는 등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이에 부산시는 올해부터 사업권역을 확대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잠재된 지역문화와 역사성을 바탕으로 제2, 제3의 감천문화마을의 가능성이 있는 영도 흰여울마을, 동구 안창마을, 그리고 서구 비석문화마을을 개선할 계획을 밝혔다.

기존의 가로환경 및 공공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보수 및 개선작업과 더불어, 흰여울마을은 폐·공가 5개동을 리모델링해 갤러리, 공예, 영상, 절영방송 등을 운영한다. 또한 순수 민간예술창작공간으로 7개동의 건물에 입주작가들이 이미 들어와 활동하고 있다. 안창마을은 마을 주민들이 건의한 공부방과 마을주자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을을 가로지르는 호계천을 자연생태하천으로 복원해 주민여가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성한다. 비석문화마을은 기존의 문화탐방로 정비와 더불어 인근 감천문화마을과 연계한 관광코스를 발굴, 조성할 계획이다.

관계자는 이번 4차년도 사업을 통해 산복도로 지역의 환경개선은 물론 문화와 예술이 접목돼 스토리텔링이 가득한 마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산광역시 창조도시기획과, 2014.3.21.

09

광주광역시, 2014년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사업 추진

주택 및 상업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40%에 달한다. 이 점을 감안하여, 광주광역시는 공동주택의 자발적 경쟁을 통하여 가정부문의 온실가스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감축하고 민·관 협력 기후변화 대응 모델을 개발하고자 '2014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월 27일 사업설명회 이후, 광주시와 〈재〉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센터는 공모를 통해 40개 아파트를 선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선정된 아파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그동안 추진한 우수사례를 모델로 아파트별 맞춤형 컨설팅, 주민리더 교육, 그린홈 디자이너 양성 및 세대별 그린홈 디자인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연말에는 온실가스 저감과 녹색생활 실천 등 2개 분야 14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22개 우수 아파트를 선정, 시상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전국 최초로 등급별 인증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은 대표적인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의 에너지 절감에 동기를 부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참여 아파트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고 온실가스 저감 활동과 녹색생활 실천에 기여해 전국 모델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으며, 그동안 아파트 총 177개가 참여해 이 가운데 55개가 우수아파트로 선정돼 주변 아파트의 녹색생활 실천 사례로 정착되고 있다. 또한 전기, 가스, 수도, 음식물 쓰레기 등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 2,334톤의 CO_2를 감축하고 이는 소나무 84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뒀다.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 2014.3.26.